

기획논문

#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장 수 찬

이 연구의 목적은 한 사회 내에서 대인간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65개국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 분석,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사용했다. 질적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경제발전, 역사적인 종교적 유산이 대인간 신뢰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민주주의 이행기를 경험한 후발 산업국가에서 대인간 신뢰수준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연구는 민주주의 이행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며, 이러한 불신은 그 사회의 제도화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제도에 대한 신뢰와 대인간 신뢰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는 달리 이행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 두 변수간에는 강한 연계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대인간 신뢰, 민주화, 정치제도의 신뢰

## 1. 서론

대인신뢰 (*interpersonal trust*)가 서구 학자들 사이에 중심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대인신뢰에 대한 연구가 급속한 물결을 타고 있다(유석춘 외, 2002). 신뢰가 이렇게 국내외 학자들의 중심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 높은 대인신뢰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Putnam, 1993; Warren, 1999; Skocpol and Fiorina 1999), 경제조직의 대규모화와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실패를 줄이고 경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인신뢰가 절대적으로 요구

장수찬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교에서 정치학 박사학  
위를 받고, 현재 목원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로 재직중이다.

jangsooc@mokwon.  
ac.kr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Fukuyama, 1999). 이렇게 대인신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이래 한국사회의 대인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그리고 1981년 이래 사회참여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는<sup>1)</sup>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의 하락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1981년에 38.0%<sup>2)</sup>였던 대인신뢰도가 1991년에는 34.2% 그리고 1997년에는 30.3% 까지 하락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인신뢰도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사회적 수준(aggregate level)에서 대인신뢰를 결정하는 요소는 개인수준(individual level)에서 대인신뢰를 결정하는 요소와 많은 차이가 있다. 대체로 개인수준에서 대인신뢰를 결정하는 요소들로 개인들의 결사체 참여정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지목된다(Putnam, 1993; Brehm and Rahn, 1997). 이에 반해, 사회적 수준에서 대인신뢰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민주주의 안정정도, 경제생활 수준, 종교문화적 유산이 자주 거론된다(Inglehart, 1999; Dalton, 2000). 본 논문은 사회적 수준에서 대인신뢰를 설명하는 모델들을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기존 연구들은 '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높은 대인신뢰수준을 보여주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어떤 경제·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은 지극히 서구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서구 중심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대인신뢰에 관한 논의를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확장시키려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예외 없이 대인신뢰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왜 정치·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후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인신뢰수준의 하락이 목격되는가? 기존 연구들이 거론해 왔던 민주주의 안정정도, 경제생활수준, 종교문화유산과 같은 변수들만으로는 이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주는 것이 불가능

하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인신뢰수준의 하락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나 법제도가 사회자본축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코헨(Cohen, 1999)의 명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화 수준(*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이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믿으며, 정치제도라는 변수를 첨가하여 대인신뢰수준의 설명모형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간의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는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데이터<sup>3)</sup>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행한 각 국가별 민주주의 등급(*democratic rating*)<sup>4)</sup>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65개 국가들을 상이성과 유사성 비교분석(*The Method of Difference and Similarity*),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혹은 상관계수 테스트(*Correlation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상 방법론에 관한 서술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2. 신뢰에 관한 일반론과 문제점

### 1) 민주주의와 대인신뢰

일반적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구성원 간의 협조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 규범,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로 정의된다’(Segageldin and Grootaert, 2000: 45~46). 사회자본의 핵심적 요소는 신뢰이다. 그리고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집단적 목표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뢰는 시민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능력이라고 보면 된다. 토론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토론과 협의과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 대인신뢰이다. 신뢰가

높을 때 민주주의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대인신뢰는 민주주의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 정부신뢰 보다 더 본질적 문제이다(Warren, 1999: 15).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는 개별 집단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제로섬게임 그라운드 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승자이든 패자이든 신뢰가 부족할 때 좀처럼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우며 게임규칙에 대한 수준 높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다원주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인신뢰라는 사회자본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가 높은 대인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변혁(*democratic transition*)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높은 대인신뢰도가 민주변혁을 유발하는 동인(*democratic trigger*)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Inglehart, 1999: 97). 예를 들면, 중국은 1990년과 1997년의 조사에서 60.3%<sup>5)</sup>와 52.3%라는 높은 대인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주의 변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높은 신뢰는 민주주의 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안정화시켜 준다.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 변혁을 설명하는 변수이기보다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성공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Inglehart, 1999: 97). 예를 들면,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 거치는 동안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민주주의가 살아남았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그리고 헝가리 등지에서는 민주주의가 살아남지 못했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전체주의 위협에 견뎌낼 수 있었던 국가들이 폭넓은 시민문화(*civic culture*)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195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가치 혹은 규범을 완전히 거부하지 못했다. 겨우 1967년에 와서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권위주의 가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독일 민주주의는 1967년에 와서야 공고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공황을 거치면서 전체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라들의 대부분은 낮은 대인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알몬드와 버바의 주장을 계승하고 있는 퍼트남(1993)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정치문화의 시민적 지향(*civic orientation*)을 강조한다. 시민공동체 지향적 정치문화는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 정치제도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장기적 안정은 이러한 정치문화에 기초해야만 한다.

‘신뢰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여 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킨다’는 명제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역도 성립한다. 즉, 민주주의 제도적 안정이 대인 신뢰도를 높여주는 데 기여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인 신뢰도가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nglehart, 1999: 97~99). 본 연구자의 조사도 이들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대상국 65개 국가를 그들의 민주화 시기와 민주주의 수준에 기초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sup>6)</sup> 그리고 이들 국가그룹간의 대인신뢰 수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민주주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절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22개 국가의 평균 대인신뢰도는 40.9%이고, 민주주의가 비교적 불안정한 9개 국가들의 신뢰도는 24.1%, 심한 정치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32개 국가들의 신뢰도는 24.0%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장기적 안정이 높은 대인신뢰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비교적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대인신뢰도엔 그다지 커다란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심한 정치변동을 경험했던 32개 국가들과 비교적 불안정한 9개의 국가들 사이에는, 대인신뢰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22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인되는 높은 대인 신뢰도가 ‘민주주의가 신뢰를 생산한다’는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확인되는 높은 대인신뢰수준은, 이들 국가들의 개인생활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높은 대인신뢰 전부를 안정된 민주주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1997년 현재 22개 선진국가의 개인 당 GDP는 평균 12,361달러이고, 비교적

으로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9개 국가의 평균은 8,257달러, 그리고 나머지 격심한 정치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32개 국가의 평균은 3,770달러이다.

## 2) 경제발전 수준과 대인신뢰

민주주의 장기적 안정보다는 높은 생활수준이 이들 국가들의 높은 대인신뢰수준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개인의 생활수준을 중심으로 신뢰도를 알아보면, 1997년 현재, 개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인 국가의 대인신뢰는 36.6%,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국가는 29.5%, 그리고 5천 달러 이하의 국가들의 대인신뢰도는 24.4%로 나타난다. 따라서, 높은 생활수준과 경제발전이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 생활수준과 대인신뢰는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인가? 밴필드(Banfield, 1967)는 빈곤은 불신을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가난한 개인일수록 다른 사람을 신뢰하여 가지게 되는 위험부담이 커지게 때문이다.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신뢰에 수반되는 위험이, 특히 절대적 빈곤 사회에서는, 자신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신뢰에 수반되는 위험이 생존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부자들은 위험부담이 발생하면 자신들이 소유한 일부를 양보하면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타인을 신뢰할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신뢰에 근거한 상호호혜의 원칙이 성립되는 것이 쉬워진다. 반대로 빈곤사회에서는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가지는 위험부담이 상승함으로써 개인들이 타인을 불신하는 것이 습성화되고, 나아가서는 대인관계에 악순환의 사이클이 형성되기 쉽다. 잉글하트(Inglehart, 1997) 역

시 그의 근대화와 가치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에 살았던 세대일수록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높은 대인신뢰도를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적 수준의 대인신뢰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서 많은 학자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적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원인 수입, 계급, 교육 등은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Brehm and Rahn, 1997: 1015). 버바, 슈로츠만, 브래디(Verba, Schlozman, & Brady, 2001)는 미국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조사한 최근 연구에서, 미국인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시간, 돈, 사회기술(*civic skill*) 그리고 동기(*motivation*)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보다 많은 사회참여가 가능해진다. 사회참여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대인접촉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퍼트남(1993)에 의하면, 빈번한 대인접촉이 곧 대인신뢰의 원천이다. 대인접촉과정에서 정직한 정보가 흐르기만 한다면 대인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퍼트남은 주장한다. 결국,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높은 대인신뢰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경제생활 수준이 대인신뢰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전통적 근대화 이론가(Lerner, 1958; Deutsch, 1961)들의 사회자본과 경제발전 사이에 일차방정식의 관계(*linear relation*)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표 1>과 <표 2>가 보여주듯이,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가진 나라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아주 낮은 인디아나 중국이 평균보다 높은 대인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보여주는 10개 국가 (1997년 기준)

국 가	대인신뢰도 (단위: 퍼센트)	개인당 GDP (단위: 달러)	민주주의 등급 (demo-rating)	종교문화적 유산
브라질	4.7	5,500	6	가톨릭
페루	5	3,320	7	가톨릭
필리핀	5.5	2,590	-	가톨릭
푸에르토리코	6	-	-	가톨릭
터키	7.8	4,210	9	무슬림
마케도니아	8.2	-	7	동방정교회
콜롬비아	10.3	5,790	8	가톨릭
베네수엘라	13.8	8,360	5	가톨릭
루마니아	16.1	3,727	5	동방정교회
슬로베니아	16.5	-	3	가톨릭

주: ① 신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답변했는가를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한 세계 가치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② 민주주의 등급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지표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1~14 scale 중에서 14가 가장 권위주의 사회를 나타내고 1은 가장 민주적 사회를 나타낸다. ③ 종교는 현재 지배적 종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종교적 문화권을 대별하여 구분하였다. ④ 신뢰도의 경우는 1997년에 조사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아 1981, 1990, 그리고 1997년의 신뢰도를 평균한 값이다.

**표 2**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10개 국가 (1997년 기준)

국 가	개인당 GDP (단위: 달러)	대인신뢰도 (단위: 퍼센트)	민주주의 등급 (1997년)	종교
인디아	1,240	36.7	6	힌두교
방글라데시	1,290	20.9	6	무슬림
나이지리아	1,540	21.2	13	무슬림
조지아	1,750	23.4	8	동방정교회
가나	2,000	22.5	7	무슬림
아르메니아	2,040	24.7	11	동방정교회
아제르바이잔	2,190	20.5	11	무슬림
중국	2,330	56.3	14	유교
몰도바	2,370	22.2	7	동방정교회
필리핀	2,590	5.5	5	가톨릭



표 3  
가장 비민주적인 10개  
국가들(1997년 기준)

국 가	민주주의 등급 (1997년)	대인신뢰도 (단위: 퍼센트)	개인당 GDP (단위: 달러)	종교
중국	14	56.3	2,330	유교
나이지리아	13	21.2	1,540	무슬림
벨로루시	12	24.8	4,244	동방정교회
몬테네그로	12	32.2	-	동방정교회
세르비아	12	29.8	-	동방정교회
아제르바이잔	11	20.5	2,190	무슬림
아르메니아	11	24.7	2,040	동방정교회
보스니아	10	28.3	-	무슬림
터키	9	7.8	4,210	무슬림
콜롬비아	8	10.8	5,790	가톨릭

### 3. 종교와 대인신뢰

신뢰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훨씬 복잡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표 1>, <표 2>, 그리고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가그룹이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그룹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그룹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보다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신뢰가 낮은 국가들 모두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를 종교문화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인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가를 20개로 확대시켰을 경우에도, 가톨릭, 무슬림, 그리고 동방정교회를 종교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각기 11개, 5개, 그리고 4개로 나타난다. 단 하나의 신흥국가나 유교 국가도 대인신뢰가 가장 낮은 20대 국가들에 속해 있지 않다. 이것은 종교문화가 대인신뢰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권위주의적인 10개 국가들의 대인신뢰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가장 권위

주의적인 10개 국가들 중에서 터키와 콜롬비아만이 아주 낮은 대인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10개 국가들이 가장 낮은 대인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예를 들면,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서 대인신뢰 순위에서 하위 10위권에 속하는 나라는 필리핀뿐이다. 그리고 필리핀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가톨릭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이다.

한 사회의 종교문화적 유산이 대인신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이유를 잉글하트(Inglehart, 1999: 92~9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의 조직체계는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체계는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 인간관계 문화를 형성시켜 왔다. 수직적 인간관계가 중심을 이루는 사회에서 정직한 정보의 흐름이 불가능하게 되고 정직한 정보를 나누어 갖지 못하는 사람사이에 신뢰가 축적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가톨릭 사회가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사회나 유교사회보다 낮은 대인신뢰를 보여주는 이유는 중앙 통제적 조직구조로 인하여 지역단위의 자율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지역단위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 역시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의 자율적 사회참여가 신뢰축적의 원천이기 때문에 중앙 통제적 가톨릭 사회에서 낮은 대인신뢰가 목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잉글하트(1999: 91~92)는 라틴아메리카의 낮은 대인신뢰도와 동아시아의 높은 대인신뢰도가 각 대륙의 가톨릭종교문화와 유교문화전통에 기인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서구 학자들(King, 1985; Pye, 1985)도 지적하고 있듯이 유교문화는 중앙 집권적이고, 수직적 질서를 중요시하고,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가톨릭종교문화의 특성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 대륙 사이에 보이는 대인신뢰 수준의 상이성을 종교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대륙간에 나타나고 있는 대인신뢰수준의 상이성은 다른 변수를 가지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4. 기존설명 모델들의 한계비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간의 대인신뢰 수준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개별국가의 경제발전 수준, 종교문화적 유산, 그리고 민주주의제도의 안정성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는 이들 변수를 여러 가지 양식으로 조합하여 몇 가지 설명모델을 만들어 본 것이다. 우선 언급한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국가간의 대인신뢰 수준의

표 4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들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개인당 GDP	.0012	.00117			
민주주의	(4.093)**	(5.875)**			
안정도	.4865		1.8197		
종교	(.931)*		(4.030)**		
	1.0442				
신교	(.991)*				
				24.886	
유교				(16.828)***	
					28.600
					(16.688)***
Adjusted R <sup>2</sup>	.38	.38	.20	.38	.00
N	56	56	64	50	6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T-value를 나타내고, 괄호 밖의 숫자는 회귀분석 계수 (OLS coefficient)이다. 위에 기록된 변수들은 0.05 혹은 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P<.05, \*\*P<.01, \*\*\*P<.001).

표 5  
신뢰, 민주주의안정도, 종교문화, 경제생활수준 사이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s)(N=34)

	신뢰	민주주의안정도	종교문화	경제생활 수준
신뢰	1.0000			
민주주의안정도	0.5708	1.0000		
종교문화	0.3427	0.5674	1.0000	
경제생활 수준	0.6427	0.8286	0.6488	1.0000

차이를 알아보았다(참조 '모델 1'). 경제생활수준이 대인신뢰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두 변수, 즉 민주주의 안정도와 종교문화는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하나 그 설명력이 경제생활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모델 1'의 결과를 가지고 '민주주의 안정도나 종교문화가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표 5>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경제생활수준, 민주주의 안정도, 그리고 종교문화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높은 상관계수는 '모델 1'에서 민주주의 안정도와 종교문화의 대인신뢰도에 대한 설명력이 경제생활수준에 예측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장 높은 대인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위 15개 국가들은, 중국과 타이완을 예외로 한다면, 1997년 현재 개인당 GDP가 15,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등급(*democratic rating*)이 조사기간동안 변화지 않았으며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일본과 북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신교를 종교문화의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관계수(*correl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와 신뢰수준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모델 2', '모델 3', '모델 4' 그리고 '모델 5'에서 확인되듯이 경제생활수준이나 민주주의 안정도,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유교는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이 설명모델은 지나치게 서구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언급된 설명모델은 안정된 서구민주주의가 왜 높은 대인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으나 급격한 정치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인신뢰도 변화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둘째, 이 설명모델은 민주변혁과 대인신뢰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인과관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단지 안정된 민주주의와 대인신뢰수준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실제로 민주변혁을 경험한 나라들 대부분은 대인신뢰 하락을 경험

하는 반면, 민주주의가 안정되었던 22개 국가는 16개 국가에서 대인 신뢰도가 상승하고, 오직 8개 국가에서 대인신뢰수준이 하락하였다.

〈표 6〉의 '정치변동이 심했던 국가'란, 민주주의 등급의 변화가 심했던 국가들이다. 이들 중에서 라트비아(Latvia)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조사기간동안(1981~1997)에 대인신뢰도 하락을 경험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표 6〉을 통하여 쉽게 읽어낼 수 있듯이, 대체로 정치·사회변동이 극심했던 러시아,

표 6  
정치변동과 대인신뢰  
수준의 변화

번호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	민주주의 등급 변화	신뢰수준 변화	번호	정치변동이 심했던 국가	민주주의 등급 변화	신뢰수준 변화
1	오스트레일리아	0	-8.1	1	리투아니아	10	-8.9
2	프랑스	0	-2	2	우동독	10	-7
3	네덜란드	0	8.7	3	라트비아	9	5.6
4	독일	0	9.5	4	불가리아	9	-1.8
5	미국	0	-4.6	5	에스토니아	9	-6.1
6	북아일랜드	0	-4	6	슬로베니아	8	-1.9
7	벨로루시	0	-1.4	7	남아프리카	8	-13.1
8	스웨덴	0	3	8	헝가리	8	-9
9	스위스	0	-5.6	9	폴란드	7	-16.6
10	덴마크	0	5	10	아르헨티나	7	-8.5
11	아이슬란드	0	3.8	11	칠레	7	-1.3
12	오스트리아	0	-	12	한국(남한)	7	-7.7
13	캐나다	0	4.6	13	러시아	6	-13.6
14	아일랜드	0	6.3	14	터키	4	-4.5
15	노르웨이	0	3.8	15	나이지리아	3	-4
16	벨기에	1	4.3	16	스페인	3	-5.4
17	인도	1	2.5				
18	일본	1	.8				
19	영국	1	-13.7				
20	이탈리아	1	8.5				
21	핀란드	1	-8.4				

주: ① 민주주의 등급변화는, 프리덤 하우스가 1981년과 1997년 사이에 발표한 민주주의 등급의 차이를 나타낸다. ② 신뢰수준의 변화는 동일한 기간동안(1981~1997)의 대인신뢰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

폴란드, 헝가리 등의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보다 많은 대인신뢰도의 하락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가톨릭문화권이나 동방정교회 문화권 국가들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대인신뢰수준이 지극히 낮았던 관계로 정치변동이후에도 대인신뢰도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터키는 1990년 조사에서 신뢰도가 10%였으며, 1997년 조사에서 이 신뢰도는 5.5%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몇몇 국가들의 대인신뢰도 하락이 경미하기는 하지만 정치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국가들은 예외 없이 대인신뢰수준 하락을 경험했다.

## 5. 정치변동, 제도화 수준, 정부신뢰 그리고 대인신뢰수준

그러면, 왜 민주변혁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대인신뢰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민주제도의 도입이 대인신뢰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명제이다. 그러나 왜 민주정부로의 권력이양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인신뢰수준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일까? 정치변동과 대인신뢰수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제도와 대인신뢰 사이의 일반적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시민개인으로 하여금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살기를 위로부터 강제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필요에 의해 사회 계약을 맺고 규칙에 합의한다. 따라서 전체주의 사회가 개인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불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들이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전체주의사회에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이상으로 타인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합리이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규율을 지키는 중요한 이윤가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적 합의에 있지 않고 완전히 강제성과 처

벌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Uslaner 1999: 141). 그리고, 일반 '권위주의' 사회 역시 강제성과 억압이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을 지키게 하는 지배적 수단이다. 따라서 권위주의 사회에서 대인신뢰는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들을 권위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로 구분하여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981년 기준으로, 권위주의 국가에 속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인신뢰도는 민주주의가 안정된 22개 선진국가보다도 오히려 높다. 반면에, 똑같이 권위주의 정권아래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아주 낮은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잉글하트(Inglehart, 1999)는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신뢰수준의 차이를(두 대륙 간에 경제생활수준이나 민주주의 지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이 통제된다고 보고), 두 대륙을 각기 지배해온 수평적 유교문화와 수직적 가톨릭 종교문화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Inglehart 1999: 91~94). 유교문화가 가톨릭 문화에 비해 덜 중앙 집중적이고 수평적이라는 잉글하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파이(Pye, 1985)나 킹(King, 1985)은 유교문화에는 사람 사이에 수직적 관계만 존재할 뿐이며 이러한 수직적 관계에 기초하여 질서를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인신뢰 수준의 차이는 두 대륙간의 문화적 유산의 차이라기보다 정치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분권화(*decentralized*)되어 있고, 제도화 수준(*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이 아주 낮은 스페인형의 국가제도를 가지고 있다(North, 1973). 이에 비해 동아시아 유교 국가들은 중앙집중적(*centralized*)이고 관료주의와 높은 제도화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국가주의자들(*statists*)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 압축산업화를 설명할 때 높은 제도화 수준과 국가구조를 곧 잘 거론한다(Haggard and Kaufman 1992: Evans 1998).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낮은 제도화 수준은 그들의 관료주의 전통 속에 잘 드러난다. 상당수의 관료들이 정치가들의 주인-

대리인 사슬(*patron-client chain*)을 통하여 관료조직에 유입되며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규칙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왜 국가제도적 특성이 대인신뢰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일까? 대인신뢰는 기본적으로 개인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는 믿음이다. 개인들은 공정한 규칙이 존재할 때 그리고 공정한 게임을 관리할 제삼자 혹은 권위가 존재할 때, 상호작용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A와 B 사이에 경제거래가 이루어지고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정확히 계약위반자를 가려내고 엄중한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행정관료의 직업주의적 태도(*professionalism*),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가권력(경찰, 군, 혹은 정보기관)이 보여주는 믿을 만한 공정성과 정직성 등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한 기초가 된다(Cohen, 1999: 218; Putnam, 1993: 128, 147). 다시 말하면, 코헨(Cohen)이 말하는 게임을 관리할 심판자의 공정성이 높은 사회에서 높은 신뢰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구가 민주성을 갖는다면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기능은 한층 높아질 것이고 대인신뢰축적에 보다 유리한 토양이 제공된다. 기존의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신뢰형성에 민주주의 제도(민주주의 정권)가 공헌할 수 있다고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나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정권형태에 상관없이 한 사회의 제도화 수준(*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을 가지고 그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체제(*regime type*)의 차별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국가간의 신뢰수준의 상이성을 제도화 수준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의 주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코헨(1999)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자. 대인신뢰는 개인들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생겨나는 특정한 상품이며 따라서 면대면 경험을 가졌던 특정 개인에게만 협소한 신뢰(*particular trust*)가 적용된다. 실제로 퍼트남의 경우, 이러한 협소한 신뢰(*particular trust*)가 어떻게 보편적 신뢰(*generalized trust*)로 전이되어 가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소규모의 면대면 접



촉이 보편적 규범, 상호호혜주의, 그리고 보편적 신뢰가 같은 사회자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면대면 접촉경험을 보편적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제도와 국가이다(Cohen, 1999: 221~222). 그리고 법을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법은 범법자에 대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 규범, 그리고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가는 개별 시민들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심판자 역할을 함으로써 게임에 개입된 사람들이 게임결과에 승복하고 규율을 체화(*internalization*)해 나가도록 해주으로써 신뢰축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치변동은 국가제도의 심판자 기능을 상당한 정도로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한다. 간단한 예로 정치변동을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범죄율 상승을 경험했다. 범죄율 상승은 민주변혁이 상당한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게임규칙에 대한 혼동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화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민주변혁과정 동안에 범죄율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민주변혁과정에서 사람들은 정치제도가 사람들 사이에 진행되는 게임과정에 공평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표 7>은 정치변동, 정부신뢰, 그리고 대인신뢰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계수 테스트(*Correlation Test*)이다. 이 표는 정치변동이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정부신뢰, 정부신뢰변화, 대인신뢰수준, 그리고 대인신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표 7>의 정치변동 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정치변동은 정부신뢰의 하락 그리고 대인신뢰수준의 하락과 같은 동적 변수(*dynamic index*)들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변동과 정부신뢰관계수는 0.5183이다. 이것은 정치변동을 경험했던 국가에서 정부불신은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정부가 게임을 관리할 제삼자로서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게임의 감독자 혹은 관리자에 대한 신뢰하

락은 필연적으로 대인신뢰하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정치변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제도가 정직하고 공정한 게임관리자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높여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위험부담이 높아지자 개인들은 정치변동과정에서 행위 선택을 달리하게 된다.

<표 7>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지표는 대인신뢰수준과는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정부신뢰수준과는 아주 약한 상관

**표 7**  
정치변동, 정부신뢰,  
신뢰수준 사이의  
상호관계(N=36)

	민주주의 지표	정치변동 수준	정부신뢰 수준	정부신뢰 변화	대인신뢰 수준	대인신뢰 변화	경제생활 수준	생활수준 변화
민주주의 지표	1.0000							
정치변동	-.6198	1.0000						
정보신뢰 수준	0.0674	-.1735	1.0000					
정부신뢰 변화	0.1611	-.5589	-.3171	1.0000				
대인신뢰 수준	0.5924	-.5535	0.1975	-.2448	1.0000			
대인신뢰 변화	-.3065	-.5183	-.1713	0.3803	0.2947	1.0000		
경제생활 수준	0.8399	-.6435	0.2281	-.3081	0.6643	-.4071	1.0000	
생활수준 변화	-.0484	0.0623	-.0345	0.1576	-.1546	0.0129	0.1991	1.0000

주: ① 민주주의 지표는 개별국가의 민주화수준을 나타낸다. ② 정치변동은 민주주의 등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③ 정부신뢰는 정부신뢰를 측정할 때 가장 대표적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입법부에 대한 신임도를 나타낸다. ④ 경제생활 수준은 1997년 현재의 개인당 GDP이다. ⑤ 조사기간인 1981~1997년 사이의 개인당 GDP의 변화이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신뢰는 정적 지표(*static index*)인 민주주의 수준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가 필연적으로 높은 정부신뢰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부신뢰수준과 대인신뢰수준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인신뢰가 정치제도 신뢰의 기본적인 전제나 설명변수가 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카아세(Kaase, 1999)의 연구도 대인신뢰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치변동이 정부신뢰수준의 변화와 대인신뢰수준의 변화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정치변동은 정적 개념인 민주주의 지표나 정부신뢰지표와는 달리 대인신뢰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 6. 결 론

한국과 같이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접근은 서구사회의 사회자본 접근방식과 달라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민주변혁이 대인신뢰수준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서구 민주주의 사회가 왜 다른 사회에 비해 높은 신뢰(사회자본)를 보여주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면, 이 논문은 '왜 정치변동과정에서 대인신뢰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비록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확장 시켜주었다고 감히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정치변동과 제도화수준에 초점에 맞추어서 잉글하트(Inglehart, 1999)의 설명모델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다. 민주주의 진전이 대인신뢰수준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민주변혁은 대인신뢰수준에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의 민주제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분적 민주화는 대인신뢰도수준을 하락시킬 뿐이다. 그리고, '민주변혁이 어떻게 대인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가'를 설명하려 시도했다. 본 연구는 경험적 테스트를 통해, 정치변동이 정부신뢰저하를 가져오고 대인신뢰하락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본 연구가 정치변동과 정부신뢰수준변화의 관계를 완전히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들 변수들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가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인 '제도화수준'이 이들 변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변동이 진행되는 모든 사회에서 제도의 붕괴가 동일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 사회의 제도화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화 수준의 차이에 따라 정치변동 과정에서 경험되는 국가기구의 일탈 수준도 다르게 나타난다. 제도화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민주변혁과정에서 폭력이 자제되고, 범죄율의 통제가 가능해지며 그리고 기존의 규범이 지켜지기 쉽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선거과정과 한국의 선거과정을 생각하여 보라. 한국은 민주변혁기간동안 낮은 범죄율과 소규모 폭력을 경험했던 것에 비해, 필리핀은 그 정반대였다. 따라서 민주변혁기간동안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국가기구의 일탈현상이 낮게 나타나고 정부의 사업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신뢰의 하락도 낮게 발생한다. 정부신뢰하락이 크지 않는 사회일수록 대인신뢰의 하락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우리사회의 신뢰에 대한 이해를 큰 폭으로 확장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 논문이 가진 한계의 주요한 원인의 대부분은 사용된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세계가치조사 데이터는 동아시아의 대인신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이러한 특성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국가별 제도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경험적 데이터

가 부족하여 제도수준과 대인신뢰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가치조사에는 많은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원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 ■ 주

- 1) 장수찬(2002) 참조.
- 2) 신뢰도 38.0%란, 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38.0%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대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세계가치조사참조).
- 3)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는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의 주관으로 산업화 진정에 따른 가치체계의 변화(예를 들면, 전근대, 근대, 그리고 탈 근대가치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총 99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1~1984, 1990~1993, 그리고 1995~1997년 등 세 번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각 시기별로 조사대상 국가 숫자는 크다란 편차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구대상국가는 65개 국가이다. 개별 국가의 표본규모는 대략 900명에서 1,200명 정도이다. 한국의 경우에 표본규모는 980명에서 1200명에 이르며 매회 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치조사에 포함된 변수들은 235개 정도이며 본 연구는 조사에 사용된 변수들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들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다(본 데이터는 미시간 대학이 주관하는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 4)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1972년 이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민주주의 등급(democratic rating)을 발표하여 왔다. 민주주의 등급은 다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권한(civil rights)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정치적 권리는 주로 선거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입후보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권력재생산 절차에 관련된 평가이고, 시민적 권한이란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평가이다. 정치적 권리가 가장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주어지는 국가가 scale=1이 되고 정치적 권리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국가가 scale=7이 된다. 시민적 권리에 관한 사항도 같은 방식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따라서 가장 정치적으로 부자유스러운 국가(예를 들면, 북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를 합하여 scale=14가 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freedomhouse.org>를 참조).
- 5) 1990년 현재 조사대상국 43개 나라의 평균 신뢰도는 35.4%였다. 따라서 중국의 대인신뢰수준은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 6) 세계가치조사는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본 연구자는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1991: 14~15)의 연구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등급에 기초하여 이들 국가들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Huntington은 1828년 이래 세계적 범위에서 민주화의 물결(*wave of democratization*)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으며 매 시기마다 역물결(*reverse wave*)이 뒤이어 일어났다. 첫 번째 그룹으로 분류된 22개 국가들은 첫 번째 민주화물결에 합류한 국가들이면서 잠시동안의 역류에 참여했거나 아예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던 국가들이다.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물결에 참여하여 공고화에 실패하였다가 최근에 와서야 민주주의가 안정화되는 경향성을 갖는 국가들과, 두 번째 민주화 물결에 합류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 내었던 국가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 나머지 국가들로서 1973년 이후 불어닥친 제3의 물결에 합류한 국가들이다.

## ■ 참고 문헌

- 박희봉·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219~237.
- 박희봉. 1999.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34권 4호, 175~196.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3~43.
- 유석춘·장미혜·배영. 2002. "좋은 통치, 사회자본, 그리고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한국 NGO 학회 춘계학술대회, 5월.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발간예정).
- Almond, Gabriel A. and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nfield, E. 1967.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Boix, Carles and Posner, Daniel N.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Oct.).
- Brehm, John and Rahn, Wendy.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 Cohen, Jean. 1999.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S. 199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Eric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Boston: Butterworth Heinemann.
-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2000. "Value Change and Democracy," Susan J Pharr and Robert D. Putnam ed.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vans, Peter. 1997. "Transferable Lessons? Re-examining the Institutional Prerequisites of East Asian Economic Polici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4 (6).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Haggard, Stephan and Kaufman, Robert R. ed. 1992. *The Politics of Economic Adjust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nglehart, Ronald.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Modernization and Post 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sse, Max. 1999.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2(3).
- King, Ambrose Y. C. 1985. "The Individual and Group in Confucianism: A Relational Perspective." in Donald J. Munro. ed. *Individualism and Holism: Studies in Confucian and Taoist Values*.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 Lin, Nan, Karen Cook, and Ronald S. Burt. 2001. ed.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Lipset, Seymour M. and Schneider, William. 1983. *The Confidence Gap*.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Newton, Kenneth, and Norris, Pippa.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Susan J Pharr and Robert D. Putnam. ed.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wton, Kenneth.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an W. van Deth, Marco Maraffi, Kenneth Newton and Paul F. Whiteley. ed.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th, Douglass C and Robert Paul Thomas. 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arr, Susan J. and Putnam, Robert D. 2000. ed.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rter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in Eric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Boston: Butterworth Heinemann.
- Porta, Donatella Della. 2000. "Social Capital, Beliefs in Government, and Political Corruption," in Susan J. Pharr and Robert D. Putnam. ed.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 \_\_\_\_\_.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ye, Lucian W. and Pye, Mary W.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erageldin, Ismail and Grootaert, Christian.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Partha Dasgupta and Ismail Serageldin. ed.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pp. 40~5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Skocpol, Theda and Fiorina, Morris P. 1999. "Making Sense of the Civic Engagement Deba," in Theda Skocpol and Morris P. Fiorina. ed.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Uslaner, Eric M. 1999.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a, Sidney, Schlozman, Kay Lehman and Brady, Henry E. 1995. *Cambridge,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Warren, Mark E. 1999. 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 Which Factors Determine the Interpersonal Trust Level of a Society:

*From a Comparative Political Perspective*

Soochan Jang

This study examines which factors determine the interpersonal trust level of a society. This study utilizes several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difference and similarity, regression test, and correlation test against 65 countrie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confirms the argument of previous studies, that democratic stabi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historic religious heritage determine the interpersonal trust level of a society, to some extent, in advanced democracies. However, previous studies failed to show why and how the interpersonal trust level has been in decline in late developers experiencing democratic transi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democratic transition almost always leads to a decline of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at the degree of this decline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at society. The loss of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in turn, causes the decline of interpersonal trust.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in contrast with the general belief that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and interpersonal trust are not associated, these two variables are strongly associated in the societies experiencing democratic transitions.